

<2025년 3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연구회 2차 긴급 성명서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을 살릴 마지막 남아있는 심폐소생술이다.”

- OECD는 59세인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한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 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 ‘퇴직후 재고용’ 활성화로 청년층과 고령 근로자 상생을 도모할 때다.
-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이미 치유가 불가능해진 근로기간 소득과 노후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촉매가 될 뿐이다!

오늘 11시부터 국회의장 주선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연금개편 방향에 대해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보니, 연금연구회가 긴급 성명서를 내게 되었다!!!

먼저, 현재 여·야가 합의하고자 하는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은 재정안정 방안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왜냐하면, ‘소득대체율 43%’안을 채택할 경우,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에 필요한 보험료가 13%가 아닌 21.2%이기 때문이다. 일시에 보험료를 13%로 올릴지라도 2050년에 미적립부채가 6,159조원(GDP 대비 119.2%)으로 급증하고, 2095년에는 4경 2,032조원(GDP 대비 311.4%)까지 늘어나게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 그로 인해 현세대에게 더 지급할 연금액의 후과는 온전히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가 된다는 거다!!

연금연구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은 절대로 재정안정 방안이 될 수가 없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편안은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여·야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하고자 하는 안이 국민연금 개혁의 애초 목표를 달성했느냐?이다. 여·야는 어떤 논리와 기준에 의해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이 재정안정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기 바란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최소한의 의무다.

연금연구회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요 국가들의 운용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동조정장치 기본 정신은 ‘세대간 고통 분담을 통한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했던 보험료 수준과 받을 연금액 사이에 그 어떤 밀접한 연관성도 없는, 소위 말하는 확정급여 연금지급방식(DB, Defined Benefit)이 초래할 망국적인 위기상황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연금제도의 숨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할 마지막 남은 보루가 자동조정장치이기 때문이다.

고작 보험료 3%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부담하고서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서 10년이나) 월급 대비 70%나 되는 엄청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세대들이, 자신들이 저세상으로 떠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자기들이 받을 연금 몫을 챙기겠다고, ‘지급보장 명문화’ 규정까지 들먹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장법 만들어 냈으니, 청년층과 미래세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대들도 우리처럼 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말이다!”

지급보장조항이 있으면 뭐하나? 돈이 있어야 연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 걷어서 연금을 주면 된다고들 하는데, 그 세금은 누가 내나? 연금지급보장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들은, 지난 27년 동안 정작 자신들은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1% 포인트라도 올리는 것조차도 반대해왔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뻔뻔한 모습을 보고서는, 벼룩조차도 대한민국에

서는 **낮짜**를 내밀기조차 힘들겠다고 토로할 상황이 되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호라는 초대형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하여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초저출생·초고령사회’라는 승객을 가득 실은 대한민국호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라는 ‘**고성능 레이다와 악천후를 이겨낼 수 있는 초강력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대한민국호가 비행 도중 태평양에 추락할 수도 있는 그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자동조정장치가 국민연금을 살릴 **마지막 남아있는 심폐소생술**이라는 점을 우리 정치권에서 공감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 문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백해무익한 논란이 아닌, **한국적인 현실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세대 간 형평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미 주요 OECD 회원국들이 20여년 전부터 운영하는 **그런 자동조정장치의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는 선언**이 **오늘**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다.

밤사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 문제 외에 정년연장 문제도 다룰 것 같다”고 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해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이미 치유가 어려워진 **근로소득과 노후소득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OECD가 지난 2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바꾸라고 그렇게도 강조해왔던** 이유다.

취업 빙하기에 놓여있는 청년층 취업문제의 숨통이 트일 때까지는 ‘**퇴직 후 재고용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층과 고령 근로자의 상생을 도모해야 할 때다. 이를 통해 현재 59세에 묶여있는 (고용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을 5% 포인트(퍼센티지로는**

10% 이상)나 더 늘릴 수가 있다. 작금의 정치권 연금개혁 합의 도출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 그것의 **5배에 달하는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금연구회는 또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을 살릴 **마지막 남아있는 심폐소생술**이다. **‘퇴직후 재고용’ 활성화**로 청년층과 고령 근로자의 상생을 도모할 때다.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이미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는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 및 노후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만날 여야 원내 대표 회동에서는 대한민국이 처한 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연금과 정년연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금연구회 긴급 성명서 논거의 참고 자료>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24년)’에 따르면 **정년 퇴직자 비율은 평균 9.3%**이다. 이승호 외 (2023)에 의하면 **정년까지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14.5%에 불과하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21.2%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94.6%에 달한다. **정년연장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그동안 OECD는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조기퇴직 주요 요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혁을 권고**해왔다.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된 이유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이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다. OECD 보고서(2022년)는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하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기준으로 13%(% 포인트로는 5% 이상)의 인상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문제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후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자발적인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청년층이 취업을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에서의 사정은 크게 다르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와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서다. 이들 사업장은 일본처럼 정년은 60세로 두면서 65세까지 '퇴직 후 재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공서열형 속성이 강한 한국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서 그렇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퇴직 후 재고용' 보편화와 이를 통한 의무납입연령 5년 연장이 '제대로 된 공적연금 강화'의 전제 조건임을 널리 알려야 할 때이다.

<출처: “세대 상생의 고용 연장, 성공적인 연금개혁 마중물이다” (계엄으로 인한 ‘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고정칼럼 미계재 원고)>